

## 전기는 재벌 · 대기업이 다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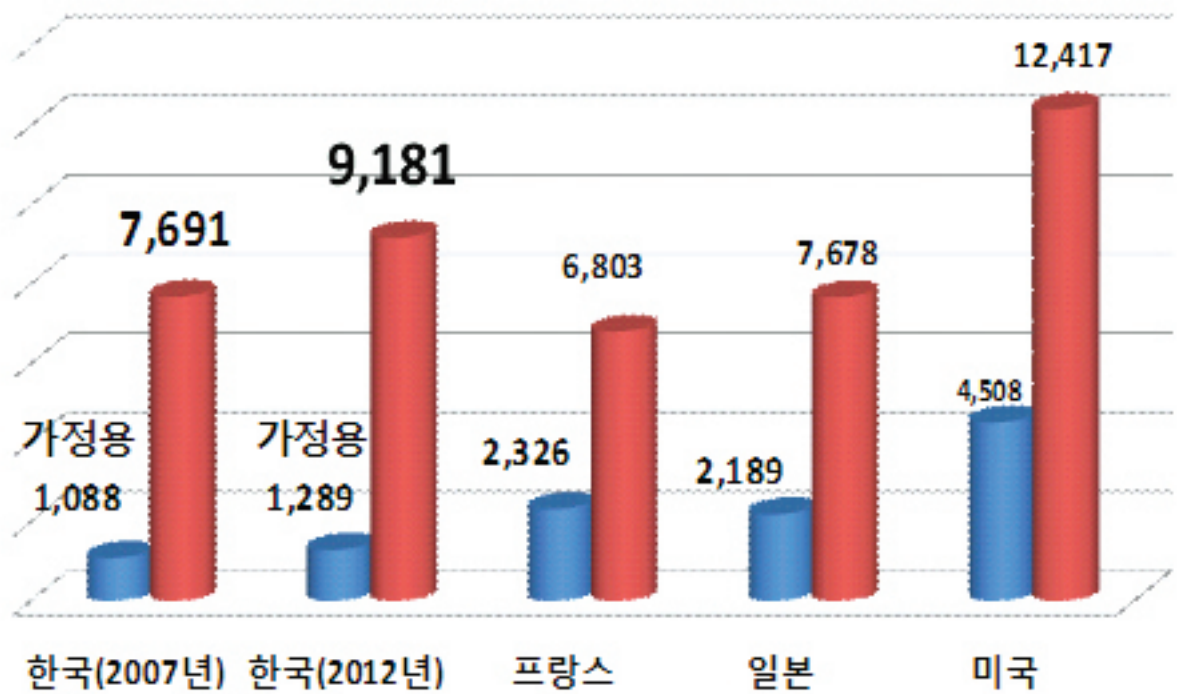
##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 합니다!

지난 12년간 산업용전기는 급증하여 가정용전기의 5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친재벌·대기업 정책으로 한전으로 하여금 산업용전기를 kWh당 92.8원인 원가이하로 공급하여 재벌·대기업들이 흥청망청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이 쓰는 가정용전기는 112.8원으로 산업용전기보다 kWh당 20원 이상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외국회사들까지 전기요금 차익만을 노리고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도 정부는 전력비상으로 전기가 모자라면 가장 먼저 가정용전기를 끊고 나중에 산업용전기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은 프랑스나 일본과 비슷하지만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그들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이

2007년 OECD국가별 1인당 전기사용량 (kWh)



후에도 산업용전기는 그림과 같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과연 전기는 누가 평평 쓰고 찹통더위에 누가 부채질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정권인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 · 대기업 소유의 민자발전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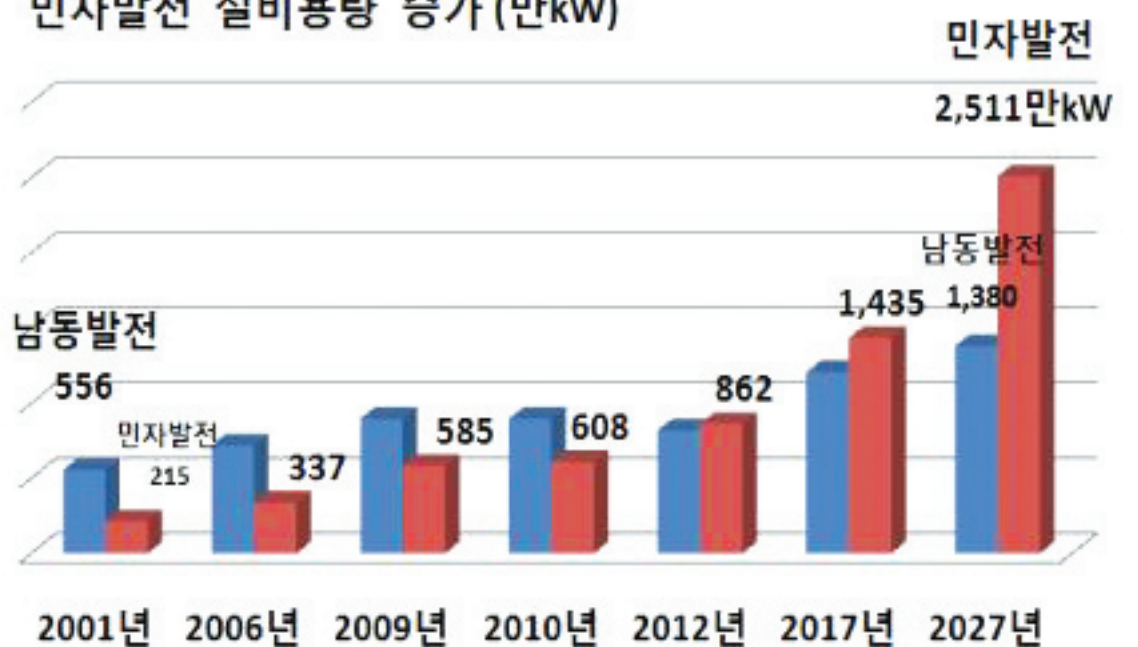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 이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대기업 소유의 민자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전설비 예비율이 점차 줄어들더니 2011년 9.15 초유의 광역정전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들어서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전력수급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포스코, SK, GS, 삼성, 현대, 대우, 대림, 동부, 동양, STX 등 재벌·대기업들은 뒤질세라 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전과 전력난 그리고 요금인상의 고통은 이들에겐 호재인가 봅니다.

이를 보여주듯 200만kW로 시작한 민자발전은 2012년 4배로 늘었고, 2027년이면

민자발전 설비용량 증가 (만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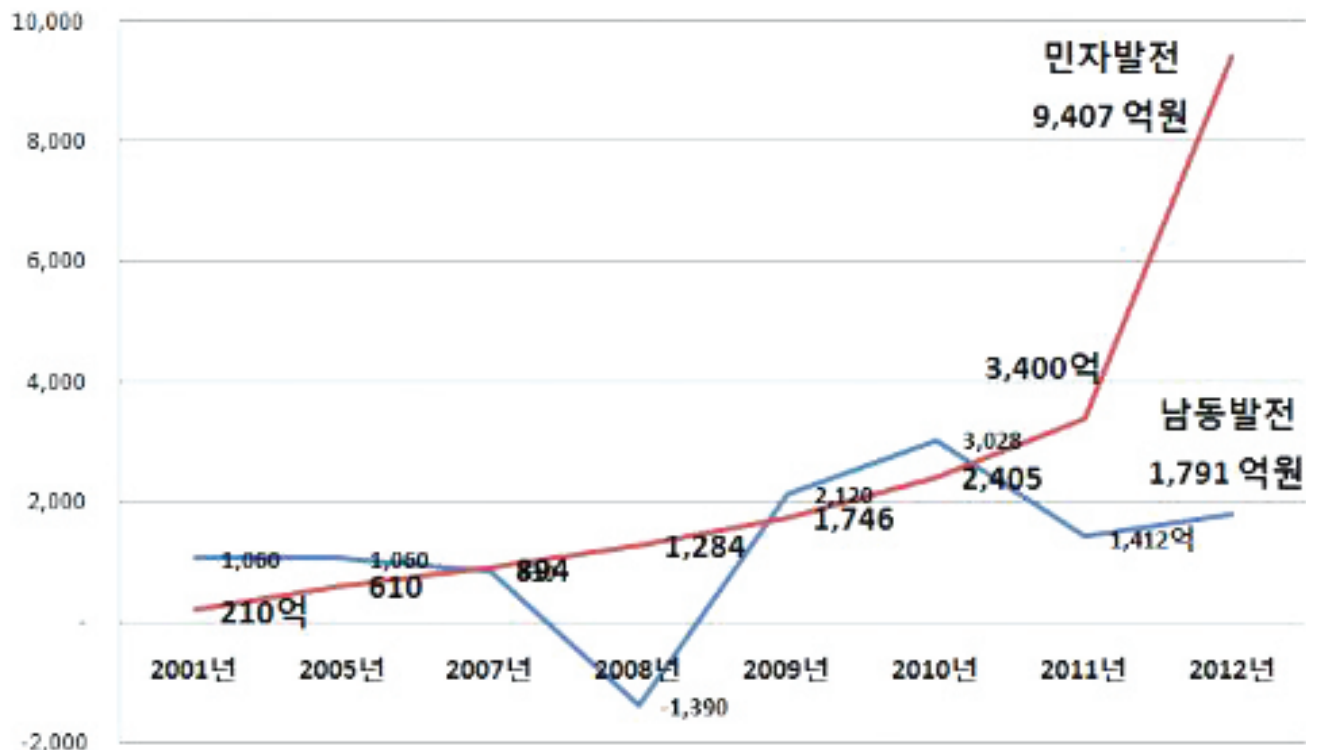
원자력 25기 용량에 해당하는 2,500만kW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2003년 매각하려다 실패한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보다 2배나 큰 전력재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산업이 파산지경으로

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전력수요관리기술인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을 판매민영화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벌 · 대기업이 앞 다투어 전력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민자발전 설비용량은 6개 발전공기업의 하나인 한국남동발전(주)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민자발전 회사들의 순이익은 전력난을 기회로 급상승하여 남동발전회사 순이익보다 5배나 많아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민자발전은 폭리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8년 남동발전이 1,400억 원의 손해를 볼 때도 민자발전 회사들은 1,20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떼돈을 버는데 가만히 있을 재벌·대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전력산업 민영화는 재벌·대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전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정부의 친재벌·대기업 정책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민자발전 당기순이익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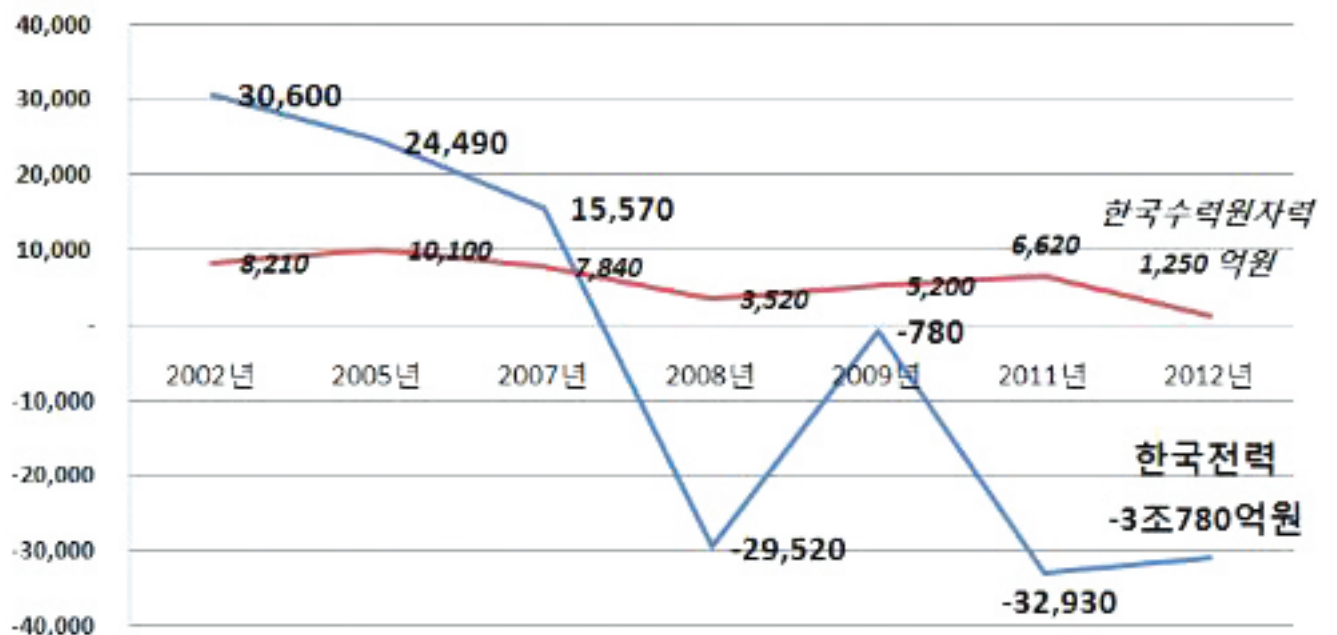
## 한전 부채 100조원 ! 재벌 · 대기업이 챙기는 만큼 국민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로 민자발전회사들은 기대이상의 이윤을 가져가지만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3조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급기야 2012년 한전의 부채는 95조원에 이르러 부채 100조원 클럽에 입성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한국전력공사는 환경문제를 제외하곤 세계가 알아주는 전력공기업이었습니다.

원자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윤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발전원가에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자로 해체비용, 각종 부대비용을 계산해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1기 해체비용만 해도 많게는 1조 2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폐기 핵연료봉도 국민 3인당 1개꼴인 약 1,600만개가 포화상태로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로 보관되

한전의 손실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윤감소(억원)



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반으로 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도 자그마치 2만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감안한다면 한수원은 상당한 이윤을 적립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챙겨주느라 한전이 파산직전인지 한수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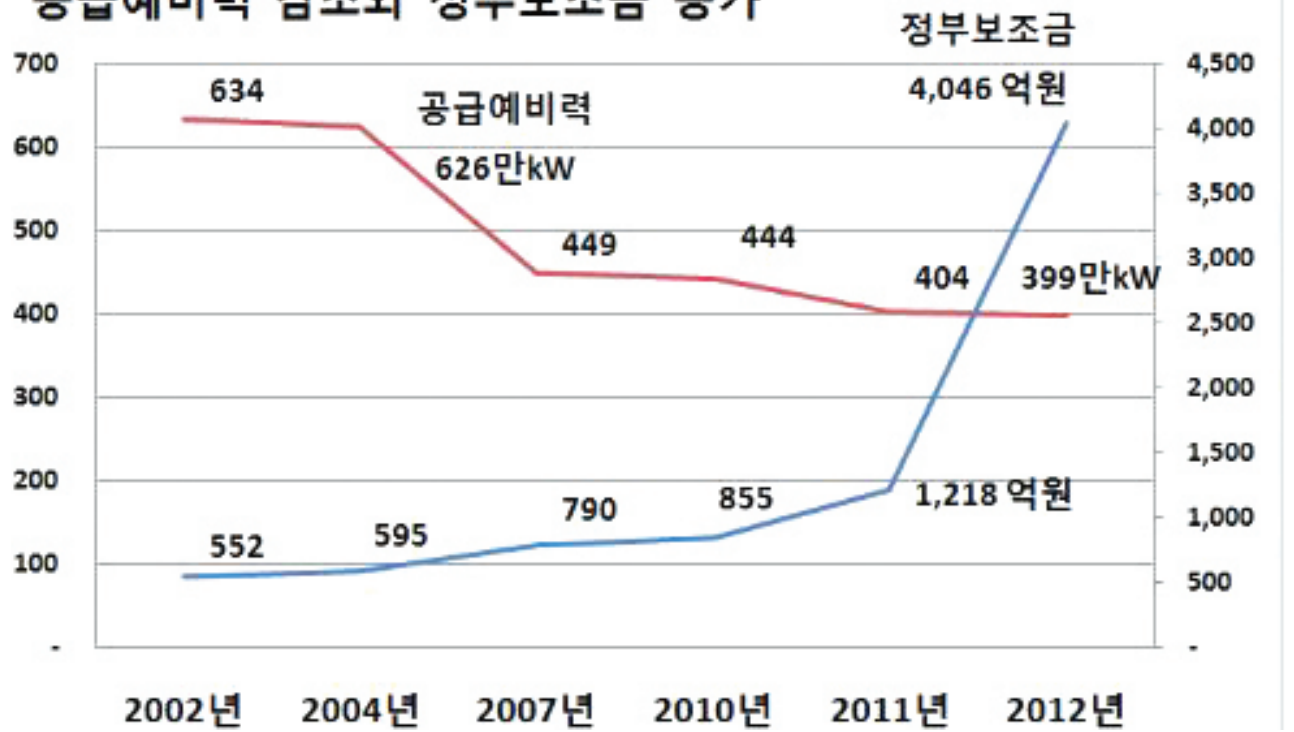
임박한 미래비용을 적립하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명박 정권이 4대강에 22조원을 털어먹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빚을 져서 물 값을 올려야하듯이,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로 한전이 진 빚과 한수원의 미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 전력난국에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보조금 지급!

2007년부터 전력예비력은 이미 전력수급비상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음 졸이며 필요한 전기까지 아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데, 정작 전력난국을 초래한 정부와 재벌·대기업들은 국민들의 전기과소비만을 탓하며 본질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이런 전력난국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전기를 절약한 대가로 재벌·대기업에 4,0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급예비력 감소와 정부보조금 증가



## 전력산업 민영화는 재벌·대기업 특혜!

국민에겐 정전, 전력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앙을 초래합니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인하하며, 국민 편익과 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력산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초유의 정전사고가 일어나고 전력수급비상이 밥 먹듯 걸리고 있습니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연료를 발전회사들이 각기 구매함으로써 연료구매력이 떨어지고, 하나의 회사가 7개로 갈라져 사장과 전무 등 간부직원들만 비대해졌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로 망가진 전력수요

관리를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인 전력기반기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발전회사간 경쟁으로 값싼 발전설비 건설, 유지·보수비용 삭감, 정비기간 단축, 저질연료 사용, 공사비 최저가 낙찰, 대대적인 설비 외주화,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발전설비 품질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돈과 노하우를 민자발전 육성에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어느 국가도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못하

였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정전과 전기요금 폭등을 겪고 나서야 전력산업을 국유화하고 규제와 통합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년 사이 4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권은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민자발전의 이윤을 보장할 전기요금 인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할된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가 소유하되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에너지복지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 박근혜 민영화 정권, 가스산업도 내주나?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대량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자 발전사업자이자 지역을 분할하여 가정용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재벌·대기업이 가스판매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저항을 의식해 새누리당을 앞세워 가스민영화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전력산업 민영화에 이어 가스산업 민영화까지 추진하여 에너지산업 전체를 재벌·대기업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산정(算定)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① **박근혜 대통령**  
"철도, 가스, 공항, 항만은 민영화 대상 아니다"  
"국민 뜻 반영하는 민영화 절대 안한다"  
후보사찰의 막속 꿰뚫고 민영화 밀어붙이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국민 여론 무시임시 정부입법,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의 실패

③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장**  
"가스민영화 법안 발의"  
가스민영화 반대하는 국민들 배도

④ **에너지 재벌**  
통신, 석유에 이어 가스, 전기까지 팔며, 대한민국에 모든 에너지 시장을 우리의 먹잇감이다!

⑤ **홍영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가스민영화 법안 계속 심의

**GS SK posco**



# 국민의 발 KTX 우리가 지킵시다!



철도에서 KTX 운행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도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려면 기다려 타야 할 정도로 드문드문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빠른 교통수단이 KTX에서 돈 벌어 이용객이 적은 적자노선을 유지하여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의 실패사례를 보더라도 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예측으로 인한 운행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명박 정권은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넘겼습니다. 만약 공항철도가 황금노선이었다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넘겼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KTX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집권하자마자 제2철도공사라는 민영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민영화를 하려고 별의별수를 다 부리는 것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민의 공복인가 싶습니다.

## 돈 보다 생명! 건강마저 팔아먹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맞춤형 복지 운운하면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집권 100여일 만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더니 의료민영화 법안을 줄줄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기 국민들의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이 병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할 수 있어 병원과 보험사 간의 직접 계약이 가능해져 보험사들은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으로 유인·알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보험회사들과 병원들은 과잉 의료행위를 할 공산이 높은 의

료호텔업(메디텔)도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발의한 원격진료법은 안전성과 효과성도 입증이 안 된 오지 혹은 무의촌 수준의 가난한 나라에서나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도 과거에 SK, KT, 엘지, 삼성 등 재벌·대기업들이 온갖 로비를 펼쳤던 법안입니다. 원격진료법은 국민들에게 진료 불안과 진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C한국대학생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청년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상 가입단체 83개 단체/조직, 가나다 순) 참관단체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